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일시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성주

프로그램

- 14:00 사회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사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14:10 발표1 **공적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통한 사회적 편익**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
- 14:25 발표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4:40 발표3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5:00 지정토론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승일 경제학 박사
이창곤 한겨레신문 기자
정재욱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 15:40 종합토론
- 16:00 폐회

목차

인사말 / 김성주	04
발제1 공적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통한 사회적 편익 / 원종현	06
발제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과 재할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 김진석	16
발제3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 이미진	37
토론1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설정해야한다 / 정용건	46
토론2 토론문 / 윤석명	48
토론3 국민연금 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토론문 / 정창률	53
토론4 토론문 (별첨 예정) / 이창곤	58
토론5 토론문 (별첨 예정) / 정재욱	59

인사말

국회의원 김성주(전주·덕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전주 덕진 국회의원 김성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정책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뜻 깊은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은 그 규모가 507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공적연금(GPIF)와 노르웨이 국부펀드(GPF)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노후를 위해 조성된 기금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기금의 99.7%는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어, 기금의 장기 지속성을 위해서는 수익률이라는 양날의 검에 큰 부분 국민의 노후를 걸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양극화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사회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낮은 복지지출로 인한 사회안전망 미비로 시작된 결혼지연, 출산기피는 세계최고의 저출산국가를 낳았습니다. 이는 생산소비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세수감소 및 재정악화를 낳아 복지기반 축소라는 악순환의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투자 일변도의 투자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국민복지 증진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에 과감하게 기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금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으로 아이 낳기 좋은 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인다면, 기금 고갈의 근본적인 원인인 납부자 감소를 막고 미래세대가 짚어지는 부담을 최소화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타당성과 구체적인 투자방안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적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통한 사회적 편익

원종현 / 국회 입법조사처

들어가며...

-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실행 이래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투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음
 - 국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기금이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에게 기금운용을 통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통상 주식투자나 채권투자가 단기적인 시간지평에서 투자되고 수익이 산정되지만, 정작 공적연금기금 운용에서는 장기적인 수익산출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
 -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연금 규모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한 세대에 걸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임
-

수익-비용에 대한 제고

- 공적연기금 투자의 사회적 수익 중 일부는 직접적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수익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적연기금 사회투자자는 더욱 정당성이 있음
-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자의 수익은 다양한 차원에서 정리됨
- 우선,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을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수익 안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직접 기여하는 부분을 추출하여 제도적 수익을 구분해내기도 함
-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적연금기금투자 범주를 구분하는 데 가장 그 개념에 충실한 기준은 투자 목적임

유형	구체적 내용
재무적 수익	사회투자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금융수익
사회적 수익	- 사회투자가 가져올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 공적연기금의 제도 수익 차원에서의 가입자 증가 및 연금비용 절감 - 사회적책임투자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민주화 및 노동조건 개선 등
사회적 비용	- 사회투자가 가져 올 부정적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투여되어야 하는 사회적 비용 - 금융부문 재무적 수익에 대비되는 기회비용

공적연금의 사회투자 근거

- **국민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본질과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한 역할**
- <국민연금 기금을 **신탁형**으로 보는 경우>
 - 국민연금기금을 사회서비스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때 최소한의 조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적 수익률을 보장
- <사회연대적 목적을 가진 **공공기금**으로 보는 경우>
 - 사회보장기금도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기에 운영 역시 공공복지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일관성 확보
 - 국민연금기금이 노후보장을 위해, 기여자들의 개별적 소유권보다는 사회 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연대 원리에 의해 형성되고 배분되는 기금이므로 수익확보의 임무만큼 '사회적 책무(social mandate)'에 충실한 투자활동이 필요
 - 국민연금기금운용은 전체 사회에서 개개인들의 삶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하며, 기금운용 과정에서 공공성과 안정성 역시 수익성과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함

공적연금의 사회투자 근거

-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고용률 개선 및 출산율 개선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금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음
 - 투자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투자와 회수의 시점을 장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연금기금의 경우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30년의 투자 기간에 이후 30년간의 수익 회수라는 매우 장기적인 리듬을 갖는 투자가 가능
 - 현재의 기금의 일정 부분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면,
 - 이 기금은 30년 이후 장기 30년에 걸쳐 지속적인 수익금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어, 현재 기금의 재정 스케줄을 보다 완만하게 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소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공적연금의 사회투자 근거

-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는 공적연금기금이 요구하는 장기적인 수익실현 목적에 충실한 투자임
 - 공적연금기금 운용에서는 장기적인 수익 산출이 더욱 중요함
 - 단기수익의 추구가 장기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못함
 - 국민연금기금이 대부분 금융시장에 투자되는 경우 주주가치를 우선으로 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구조조정을 옹호하게 될 경우, 주식투자는 오히려 기금 기여자로서 기금원천이 되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주주가치를 추구할 위험성이 큼
 - 제도적 관점에서 장기 수익은 출산율 제고와 개인별 생산성 향상을 투자목적으로 상정하여야 함
-

공적연금의 사회투자 근거

-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생애 전반에 걸친 편익과 비용의 재분배를 하는데 기여
 - 국민연금 사회서비스투자가 생애에 걸친 비용부담과 편익을 고르게 분산
 - 특히 보험료 부담을 하는 시점에 편익을 누리도록 하는 장치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세대간 연대 및 통합
 -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는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사회적 편익을 집단 간에, 생애시점별로 분산시킴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공적연금의 사회투자 근거

- 사회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금이 활용
 - 국민연금기금투자를 통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제공하는 편익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
 - 연금제도의 혜택 역시 노인세대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바,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발생하는 재무적 수익의 혜택은 국민연금급여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3에게만 주어지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는 투자 영역을 정책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이 가져오는 편익을 세대간에, 그리고 노인들 내부에서 고르게 제공하는 방안
-

공적연금의 사회투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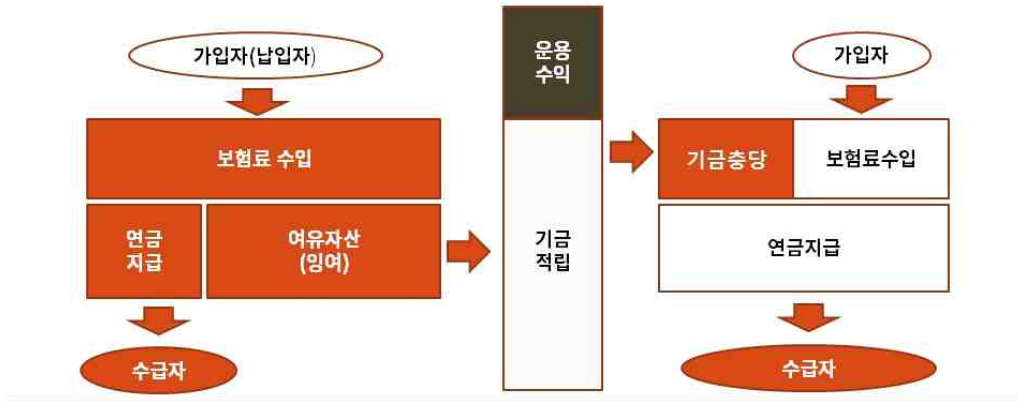
- 사회투자가 유발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
 - 공적연기금 투자의 사회적 수익 중 일부는 직접적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
 - 사회투자의 제도적 수익 논리는 공적연금제도의 사회적 지속가능성(social sustainability) 개념
 - 기금의 소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금이 회수될 수 있는 투자 방안
-

공적연금의 사회투자 근거 (소결)

- 공적연금기금 사회투자의 제도적 수익 논리는 공적연금제도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social sustainability) 개념을 염두에 둔 것
 - 사회적 지속가능성 논리는 공적연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금융투자 수익 위주의 논리와 기반을 달리함
 - 공적연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은 공적연금제도의 존립은 연기금 규모 자체보다는 사회의 존립과 경제사회적 발전에 달려있다는 논리에 기반
 - 공적연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요소들은 인구균형과 관련된 출산율, 고용률, 보험료 수입 등
 - 사회적 비용(social cost) 축소 역시 공적연금 사회투자를 주장하는 주요한 근거
 - 특정한 영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전체 사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 특히 사회서비스투자에 타당성을 부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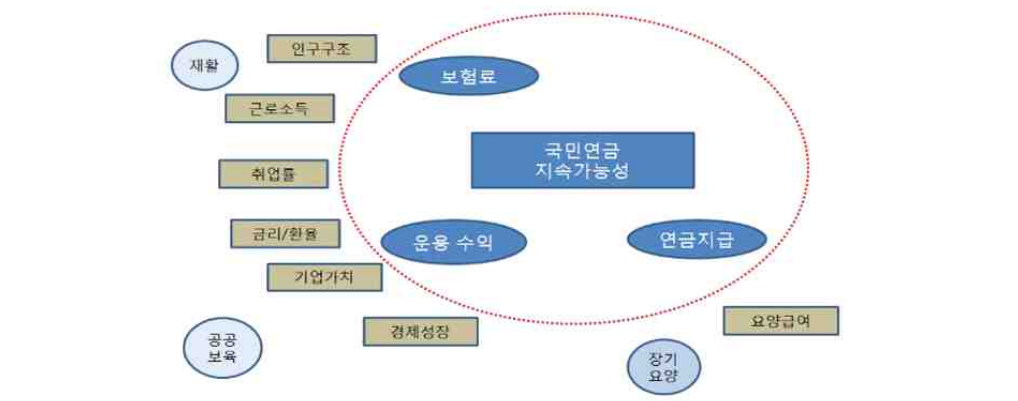
제도 지속성을 위한 현금흐름 개선

- 연금 적립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직접적으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금, 연금급여의 지출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정리
- 지금까지의 재정안정화 노력은 납부금과 지출금을 정책적으로 통제하고, 운용수익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정되어 왔음



공공투자를 통한 사회적 편익 경로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행태는 운용수익부문에만 집중되지 않음
- 공적연금으로서의 제도와 그 환경, 국가적 거시경제의 틀 내에서 연금제도의 지속성으로 인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임



사회적 편익 추정

- 산업연관표를 적용한 사회적 편익 추정

분야	수요	경제적 효과
공공보육	2027년 목표 국공립 보육시설 목표치 30% 총 10,219개 (연 786개 보육시설 확충)	-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 -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
	5조 1,117억원 ~ 13조 4,889억원	- 생산유발효과: 9조 6,713억원 ~ 23조 6,290억원 - 부가가치 유발: 3조 9,156억원 ~ 10조 3,325억원 - 취업유발 효과: 19만 4,133명 ~ 51만 2,283명
공공재활	2027년까지 추가 확충 입원재활 병상 수 3,000~6,000	-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향상 -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 -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
	6,501억원 ~ 1조 3,073억원	- 생산유발효과: 1조 1,052억원 ~ 2조 2,224억원 - 부가가치 유발: 5,187억원 ~ 1조 430억원 - 취업유발 효과: 7,931명 ~ 15,949명
노인요양	2027년 공공노인요양시설 부족분의 30% ~ 80% 충당	-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장기요양 종사자의 신분 및 노동조건 개선, 이직률 감소,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효과 -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시설입소 노인의 가족들의 경제활동(취업준단자 감소, 근로시간 증가) 또는 사회활동 참여 기회 증가
	2027년 노인입소율과 공공시설 충족률에 따라 1조 4,500억원 ~ 4조 4,700억원	- 생산유발효과: 2조 7,434억원 ~ 8조 4,572억원 - 부가가치 유발: 1조 1,102억원 ~ 3조 4,225억원 - 취업유발 효과: 5만 5,068명 ~ 16만 9,762명

공공부문의 산업연관 효과

생산 유발계수

상호	상품	070	071	072	073	074	075	076	077	078	079	080	081	082	083
064	영양·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0.026	0.001	0.023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19	0.027	0.002	0.000	1.319
065	관용서비스	0.021	0.013	0.040	0.025	0.023	0.019	0.015	0.029	0.033	0.027	0.038	0.055	0.030	3.361
066	보험서비스	0.036	0.005	0.024	0.016	0.020	0.003	0.004	0.019	0.006	0.008	0.010	0.006	0.011	1.794
067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0.005	0.002	0.005	0.003	0.004	0.002	0.002	0.004	0.003	0.003	0.003	0.004	0.003	1.421
068	주거서비스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000
069	부동산서비스	0.022	0.012	0.061	0.031	0.027	0.008	0.019	0.041	0.037	0.014	0.018	0.067	0.028	2.712
070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1.101	0.008	0.003	0.005	0.002	0.011	0.001	0.007	0.005	0.005	0.012	0.002	0.001	1.406
071	연구개발	0.000	1.01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011
072	사람관련 전문서비스	0.020	0.007	1.027	0.014	0.013	0.007	0.007	0.010	0.014	0.019	0.018	0.019	0.008	2.239
0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0.008	0.018	0.020	1.021	0.007	0.004	0.005	0.005	0.004	0.005	0.004	0.004	0.006	1.872
074	사업지원서비스	0.030	0.010	0.018	0.027	1.029	0.016	0.011	0.011	0.019	0.043	0.039	0.022	0.010	2.616
075	공공행정 및 국방	0.002	0.001	0.004	0.002	0.003	1.001	0.001	0.003	0.003	0.002	0.003	0.005	0.002	1.187
076	금융서비스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1	0.000	0.000	0.000	1.000
077	의료 및 보건	0.002	0.002	0.004	0.006	0.006	0.005	0.004	1.005	0.007	0.004	0.003	0.006	0.003	1.264
078	사회복지서비스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000	0.000	0.000	0.000	0.000	1.000
079	문화서비스	0.00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1.000
0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0.001	0.004	0.002	0.004	0.003	0.000	0.002	0.001	0.001	0.002	1.007	0.013	0.001	1.149
081	사회단체	0.002	0.001	0.003	0.002	0.001	0.001	0.005	0.001	0.004	0.002	0.002	1.002	0.001	1.112
082	수리 및 개인 서비스	0.032	0.008	0.006	0.009	0.008	0.015	0.005	0.019	0.010	0.008	0.007	0.011	1.004	1.540
083	합합	1.716	1.644	1.887	1.571	1.552	1.361	1.438	1.700	1.892	1.755	1.891	1.962	1.936	157.254

부가가치 유발계수

상호	상품	069	070	071	072	073	074	075	076	077	078	079	080	081	082	083
0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0.001	0.005	0.011	0.012	0.623	0.004	0.003	0.003	0.003	0.002	0.003	0.002	0.002	0.004	1.141
074	사업지원서비스	0.011	0.020	0.007	0.012	0.018	0.690	0.011	0.007	0.008	0.013	0.029	0.026	0.015	0.007	1.755
075	공공행정 및 국방	0.004	0.001	0.001	0.003	0.002	0.002	0.776	0.001	0.002	0.003	0.001	0.002	0.004	0.002	0.921
076	금융서비스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1	0.73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759
077	의료 및 보건	0.002	0.001	0.001	0.002	0.003	0.003	0.003	0.002	0.526	0.004	0.002	0.001	0.003	0.001	0.661
078	사회복지서비스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462	0.000	0.000	0.000	0.000	0.000	0.462
079	문화서비스	0.000	0.002	0.001	0.010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0.376	0.004	0.003	0.000	0.756
0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0.001	0.001	0.002	0.001	0.002	0.002	0.000	0.001	0.001	0.001	0.001	0.488	0.006	0.001	0.557
081	사회단체	0.00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	0.002	0.001	0.002	0.001	0.001	0.447	0.000	0.496
082	수리 및 개인 서비스	0.002	0.016	0.004	0.003	0.004	0.004	0.007	0.002	0.009	0.005	0.004	0.003	0.006	0.497	0.762
083	합합	0.883	0.812	0.792	0.872	0.830	0.880	0.910	0.884	0.798	0.766	0.829	0.791	0.811	0.779	54.408

생산유발계수표의 의미

-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낸 것
-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동 재화 및 서비스 이외에 해당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투입재의 생산이 해당 재화 및 서비스의 투입계수에 따라 연속적으로 필요하게 됨
- 이러한 투입계수를 매개로 최종수요에 의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생산의 크기를 생산유발효과라고 하고 이를 계측,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임

	1부문	2부문	3부문	행합계
1부문	r_{11}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1부문의 산출단위	r_{12}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1부문의 산출단위	r_{13}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1부문의 산출단위	$r_{11}+r_{12}+r_{13} : S_1$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1부문의 산출단위
2부문	r_{21}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r_{22}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r_{23}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r_{21}+r_{22}+r_{23} : S_2$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3부문	r_{31}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r_{32}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r_{33}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r_{31}+r_{32}+r_{33} : S_3$ 각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열합계	$r_{11}+r_{21}+r_{31} : R_1$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전부문의 산출단위	$r_{12}+r_{22}+r_{32} : R_2$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전부문의 산출단위	$r_{13}+r_{23}+r_{33} : R_3$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전부문의 산출단위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 분석해설』, 2015, p.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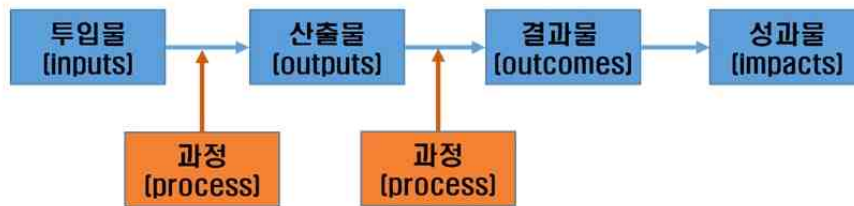
공공부문의 연관효과

- 상품별 취업(고용)유발계수 :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 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피용자) 수

상품	전업환산 기준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064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	16.5	12.4
065 금융서비스	10.3	8.9
066 보험서비스	15.4	12.9
067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18.1	14.9
068 주거서비스	2.2	1.8
069 부동산서비스	13.5	9.0
070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11.7	8.1
071 연구개발	13.1	11.4
07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24.9	21.0
073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15.6	11.7
074 사업지원서비스	31.2	28.3
075 공공행정 및 국방	11.8	10.8
076 교육서비스	18.5	13.9
077 의료 및 보건	14.7	12.2
078 사회복지서비스	42.7	38.0
079 문화서비스	22.3	15.2
0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16.8	9.5
081 사회단체	27.1	23.2
082 수리 및 개인 서비스	32.9	15.5
083 평균	12.6	8.6

측정의 문제

- 사회투자는 재무적 투자와 같이 수익의 전부가 현금의 증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님
- 사회투자를 하나의 투자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투자의 가치가 증명될 필요가 있음
- 사회투자란 일반 재무투자과 같이 수익의 전부가 실제 현금 흐름이나 가치의 증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측정 가능한 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대응변수들을 적용하게 됨
- 반면, 사회투자에 대한 효과를 과장하여 기대할 경우,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에 대한 신뢰나 효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가능한 보수적 관점에서 그 효과를 측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한계

-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 투자 성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과정이 불분명할 경우, 전체적인 확산 효과까지도 투자 성과로 계량되어 과대평가
-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 복지투자의 방식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이 투자의 확대를 제한
- 사회서비스 투자를 금융부문 투자에 포함된 대체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 국민연금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인 사회적 수익은 과정상의 수익을 포함함. 과정상 수익의 중요한 일부가 공공사회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니만큼, 누가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에서 핵심적인 문제

나가며...

- 대안적 투자로서 직접적인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사회투자의 의미에도 부합
 - 기금운용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족한 공적사회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시설투자과 인력 투자는 금융투자와는 다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
-

발제 2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육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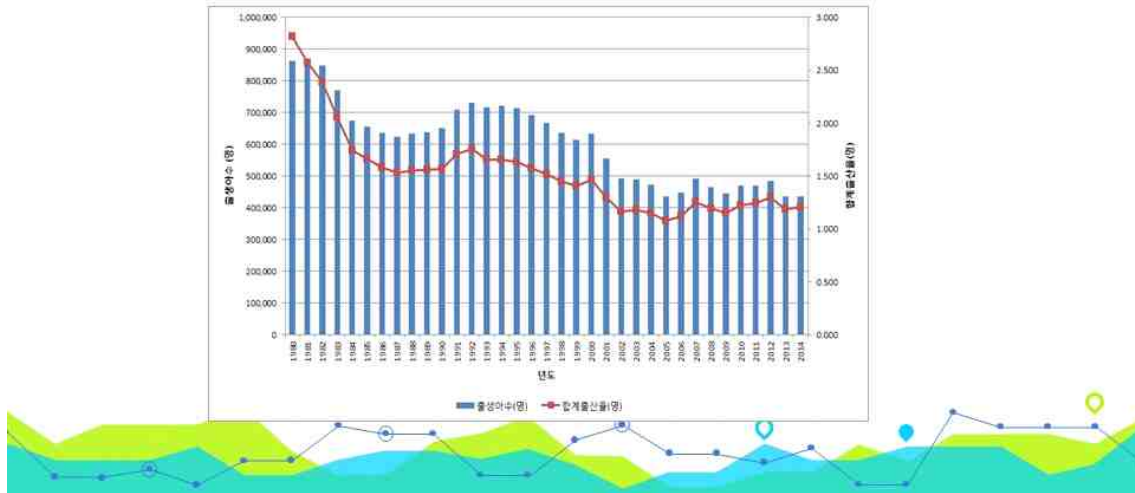
1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의 전환

- 1983년 합계 출산율 2.06명으로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 하락세
- 2014년 현재 1.2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 출산률은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을 가속화하는 주요한 요인
- 2001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지속되는 초저출산 현상 경험중임



우리나라 출생아수와 합계출산률 추이 (1980-2014년)



저출산의 사회적 파급력

-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력 질 저하로 성장잠재력 약화
-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로 인해 사회제도의 재정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저해 및 세대간 갈등 야기 가능성 증대
- 교육, 주택,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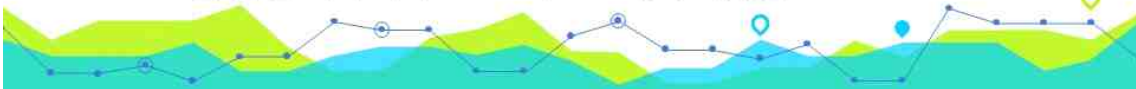
보육은 고용 일 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임

이에 보육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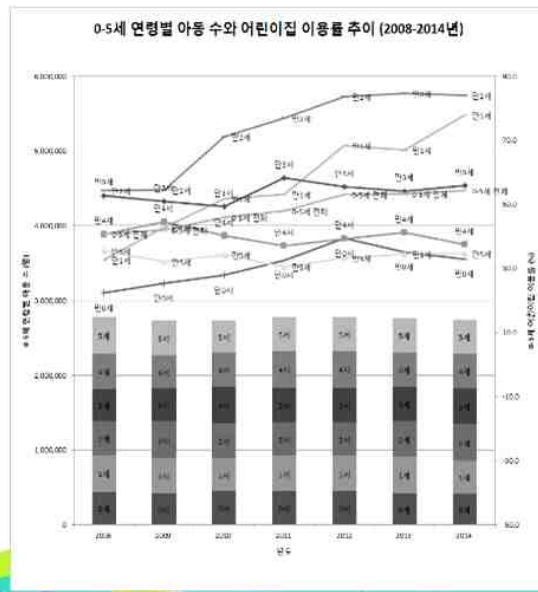


어린이집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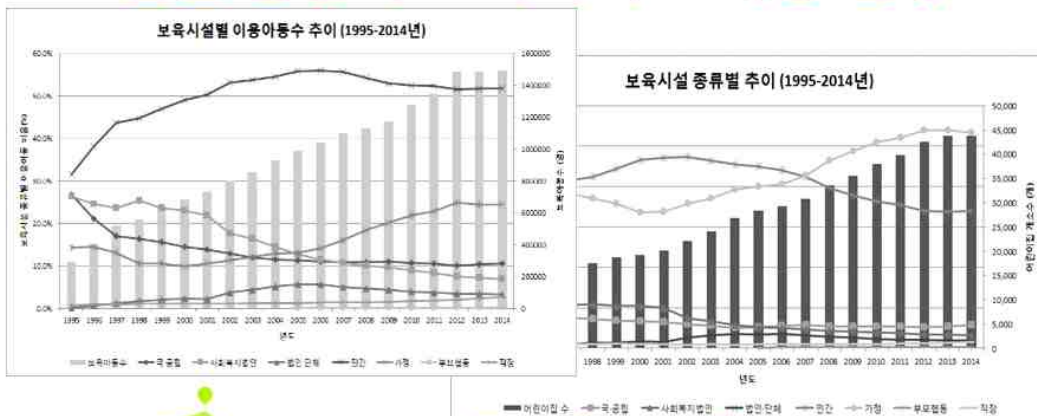
-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0-5세 전체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약 54%에 해당함
- 0-5세 보육대상 아동 기준 2008년 40.8%이던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4년에는 54.3%로 약 33% 성장하였음
- 특히 만1세와 만2세 아동의 이용률은 2008년 각각 32.6%와 54.2%이던 것이 2014년에는 78.0%와 84.0%에 달해 동일 기간 내에 각각 139%와 56% 성장하였음



연령별 아동 수와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최소한으로 적정화된 질'을 추구하면서 특별활동비 등 추가적인 수입원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음
-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구조는 보육교사들의 신분 불안정과 취약한 근로조건에 연결되어 있음



“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성 강화의 문제는 5:95의 벽을 깨는 문제이며

이와 같은 인프라의 확대는 상당한 초기비용을 수반하는 사회적 투자임

보육 공공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투자적 개입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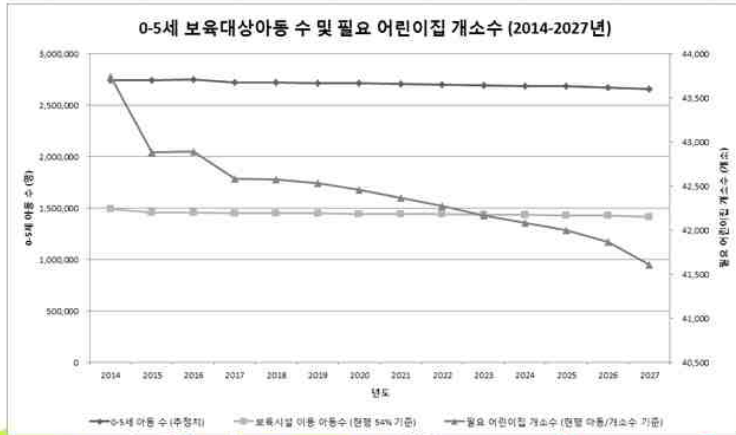
사회적 수요 분석

2

보육의 사회적 수요 전망

- 2014년 현재 274만 명에 이르는 0-5세 아동인구수는 2027년 266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
- 보육시설 이용률의 경우 무상보육이 도입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값을 해당연령별로 계산하여 활용함
- 계산 결과 2014년 현재 149만 명에 이르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2027년에 142만 명으로 약 4.9% 감소할 것임
- 이에 따라 필요한 보육시설의 공급량도 2014년 현재 43,742개에서 2027년 41,610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보육대상 아동 및 어린이집 추세



보육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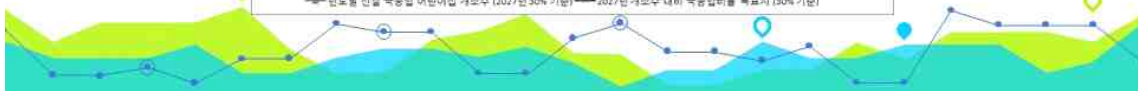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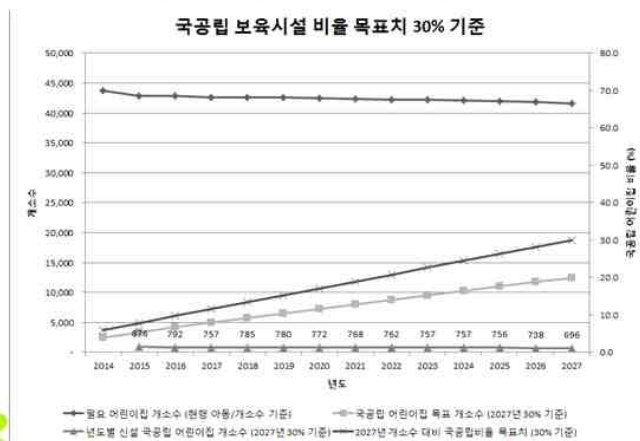
3

보육인프라 확충 규모

-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30% 달성 목표
- 위 목표달성을 위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를 광역시·도별로 추산하였음
- 2027년까지 총 10,219개,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 신규 공급 필요한 것으로 추정



연도별 보육시설 개소수 추산 (2014-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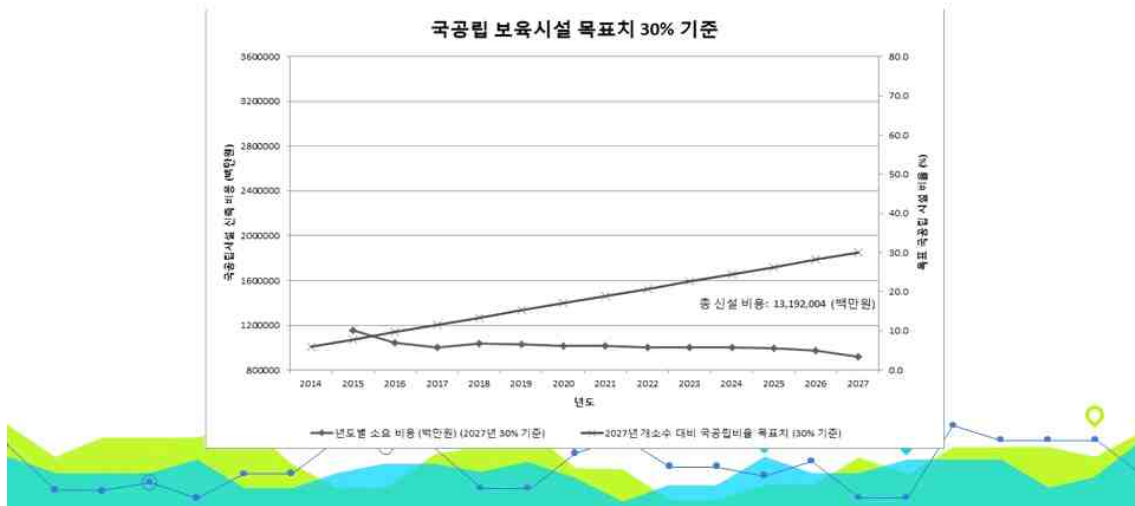
광역시도별 필요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총계
서울	64	97	83	92	91	91	91	90	88	88	88	85	79	1128
부산	35	34	31	33	32	32	32	32	31	31	31	30	29	414
대구	39	33	32	33	32	32	32	32	32	32	31	31	29	419
인천	49	43	40	42	42	42	41	41	41	41	41	39	37	539
광주	22	27	26	27	27	27	27	26	26	26	26	25	24	336
대전	42	37	35	36	36	36	36	35	35	35	35	34	33	464
울산	15	20	19	19	19	19	19	19	19	19	19	18	17	242
세종	3	3	3	3	3	3	3	3	3	3	3	3	3	38
경기	220	268	252	262	260	259	259	256	254	254	253	245	235	3277
강원	25	23	21	22	22	22	22	21	21	21	21	20	19	280
충북	29	24	22	23	23	23	23	23	23	23	23	22	21	301
충남	36	43	41	42	42	42	42	41	41	41	41	40	38	528
전북	30	35	33	34	34	34	34	33	33	33	33	32	30	427
전남	23	22	20	22	22	21	21	21	21	21	21	20	19	275
경북	41	41	38	40	40	40	40	39	39	39	39	38	36	510
경남	77	71	67	70	69	69	69	68	68	68	67	65	62	891
제주	12	12	11	12	12	12	12	12	11	11	11	11	11	150
전체	762	833	774	812	806	802	801	794	785	785	783	758	723	10219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원 규모

- 1안: 2009년 복지부 기준 평균 어린이집 설치 비용 이용
 - 396 제곱미터 이하: 5억 5백만원
 - 396 제곱미터 이상: 18억 87백만원
 - 총 설치비용: 13조 4,889억 원 (연 평균: 1조 38억 원)
- 2안: 지역별 공시지가 및 표준건축비용 활용
 - 법정 전용면적: 4.29제곱미터/명
 - 표준건축비: 1,715천원/제곱미터
 - 총 설치비용: 5조 1,117억 원 (연 평균: 3,936억 원)

연도별 보육시설 확충 재원 (2014-2027)



확충 보육인프라 운영방안

- 1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리
 - 민간위탁운영과 지자체 운영모두 가능
 - 민간위탁 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별도 조치 필요
- 2안: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
 - 공단 산하에 별도재단 설립하여 관리 위임하는 방식 고려
 - 현실적으로 소수의 reference centers를 관리하는 제한적 역할



국민연금 보육인프라 투자의 사회적 편익

4

보육인프라 확충의 사회적 편익

- 보육공공성 강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
 -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서비스 질 개선 효과
 - 기존 가족돌봄제공자들의 사회활동 참여 강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육서비스 제공의 비용과 사회적 편익 계산 예(덴마크 사례)

* 출처: 요스타에스핑-안데르센 (2009), 끝나지 않은 혁명, 푸은선, 김영미 옮김, 나눔의집.

가정: • 두 자녀를 둔 3035세 여성 • 1년 출산/육아휴직을 제외하고는 고용 단절시기가 없음. • 평균임금의 67% 수준의 임금 • 60세까지 계속 일을 할 것임.	
정부지출비용	유로Euro
보육시설 creche에서 2년	-24,000
유치원 preschool에서 3년	-48,850
합계	-72,850
엄마의 편익	
(a) 5년간의 임금총액	-114,300
(b) 경력유지로 인한 평생임금 수익	-200,100
합계	-314,400
정부 재정수익	
(a)로 인한 추가 수입	-40,000
(b)로 인한 추가 수입	-70,000
합계	-110,000
정부 재정상의 순 편익	110,000 - 72,850
	-37,150

보육인프라 확충의 사회적 편익

-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확보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현 세대 가입 기반 확대
 -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13만 8천명 규모 대체 효과)으로 현 세대 가입 기반 확대
 - 저출산 극복에 따른 세대간 지속 가능성 강화



재활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1**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으로 추정됨(등록 장애인은 250여 만 명)
- 인구 고령화와 생활·노동조건 변화로 인해 장애 발생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전체 장애인 중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비율(중도 장애인 비율)이 88.9%임
- 중도장애인의 69.9%가 직업을 가지길 원하지만,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3.1%에 불과함
- 우리나라 장애인의 사회 복귀율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 선진국의 교통사고 환자 사회 복귀율은 70~80%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 복귀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함



재활 인프라 공급 현황

-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요양병원 제외)은 총 660여 개소임
-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
-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함
- 2015년 현재 경인(인천), 강원(춘천), 영남(양산), 충청(대전), 호남(광주), 제주(서귀포) 권역의 재활병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향후 2개소의 권역재활병원을 추가 확충할 계획임



“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장애를 경험한 사람이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됨



재활의 사회적 수요 전망

- 2014년 현재 273만 여 명으로 추정되는 장애인은 2027년 까지 291~469만 여 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추정 장애인수와 장애 출현율

(단위:천명, %)

주:추경 1. 2014년 장애 출현율유지
추경 2. 2005-2014년 동안의 장애 출현 증가율 적용
추경 3. 65세 이상 인구비중증가를추 정치 적용

	추정 1		추정 2		추정 3	
	장애인 수	출현율	장애인 수	출현율	장애인 수	출현율
2014	2,726	5.59	2,726	5.59	2,726	5.59
2015	2,829	5.59	2,886	5.70	2,817	5.78
2016	2,840	5.59	2,953	5.81	2,908	5.96
2017	2,850	5.59	3,020	5.92	3,006	6.16
2018	2,859	5.59	3,086	6.03	3,113	6.38
2019	2,867	5.59	3,152	6.15	3,238	6.64
2020	2,875	5.59	3,218	6.26	3,383	6.94
2021	2,883	5.59	3,284	6.37	3,542	7.26
2022	2,889	5.59	3,349	6.48	3,711	7.61
2023	2,895	5.59	3,413	6.59	3,890	7.98
2024	2,901	5.59	3,477	6.70	4,080	8.37
2025	2,905	5.59	3,540	6.81	4,279	8.77



재활 인프라 확충 및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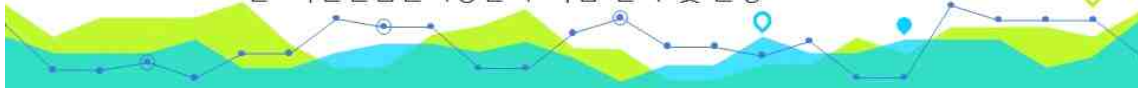
3

재활인프라 확충 규모

-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 (총 7개소)
 - 기존 권역별재활병원의 개소당 설립예산은 약 330억원(국비, 지방비 포함)으로, 권역별재활병원 7개소(총 1,050병상)를 추가 설립하는데 2,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현행의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단위로 총 250여 개소의 지역재활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잠정 추정함
 - 2027년까지 추가로 확충되어야 할 입원재활 병상은 3천 개에서 6천 개 규모로 추정. 총 소요재정은 6,521억원에서 1조3,073억원 규모로 추정됨(연차별로 약 502억원에서 1,006억원 규모)

확충 재활인프라 운영방안

- 재활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는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전망
 - 권역재활병원과 지역재활센터 확충에 소요되는 재활의학 전문의 260명 규모
 - 매년 신규 배출되는 재활의학 전문의 110여명 규모
- 재활인프라 운영방안
 - 1안: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차입하여 설립 및 운영
 - 2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설치 및 운영

A decorative graphic featuring a line chart with blue and green data points and lines, overlaid on a background of green and blue wavy shapes.

국민연금 재활인프라
투자의 사회적 편익

4

재활인프라 확충의 사회적 편익

- 재활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사회복귀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반 확대 (약 32만 4천명 수준 추가가입 가능)
- 재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재활 병원 200여 개 일자리
 - 지역재활센터 7,000여 개 일자리



Open this document in Google Slides (If you are at slidescarnival.com use the button below this presentation)

You have to be signed in to your Google account

EDIT IN GOOGLE SLIDES

Go to the **File** menu and select **Make a copy**.

You will get a copy of this document on your Google Drive and will be able to edit, add or delete slides.

EDIT IN POWERPOINT®

Go to the **File** menu and select **Download as Microsoft PowerPoint**. You will get a .pptx file that you can edit in PowerPoint.

Remember to download and install the fonts used in this presentation (you'll find the links to the fontfiles needed in the [Presentation design slide](#))

More info on how to use this template at www.slidescarnival.com/help-use-presentation-template

This template is free to use under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If you use the graphic assets (photos, icons and typographies) provided with this presentation you must keep the [Credits slide](#).



CREDITS

Special thanks to all the people who made and released these awesome resources for free:

- Presentation template by [SlidesCarnival](#)
- Photographs by [Unsplash](#)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순서

-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투자의 근거 및 필요성
-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공급현황 및 전망
-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현황 및 전망
-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투자규모 및 고려사항
-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투자방식 및 거버넌스
-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투자의 사회적 수익 및 제도적 수익

투자의 근거 및 필요성

❖ 국민연금 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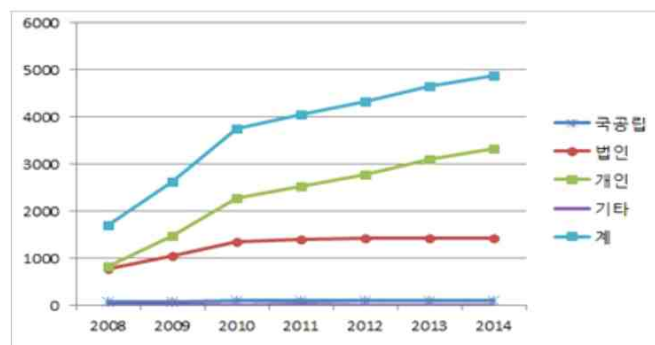
- 국민연금 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국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
- 국민연금 기금 복지투자의 근거, 사회서비스확충의 공감대 형성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 투자의 필요성

- 노인돌봄의 보편적 권리보장 및 접근의 형평성 제고
- 시장화된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급체계 문제와 서비스의 질 개선의 역할
 - 비영리의 영리화
 - 규제, 감독의 제한적인 효과: 영국, 한국사례
 - 국공립 시설: 지역사회와의 개방성, 모니터링 용이(예: 옴부즈맨, 인권지킴이단 등)
- 사회적 수익, 제도적 수익의 창출
- 국가의 장기요양시설 공급에 대한 책임의 강제,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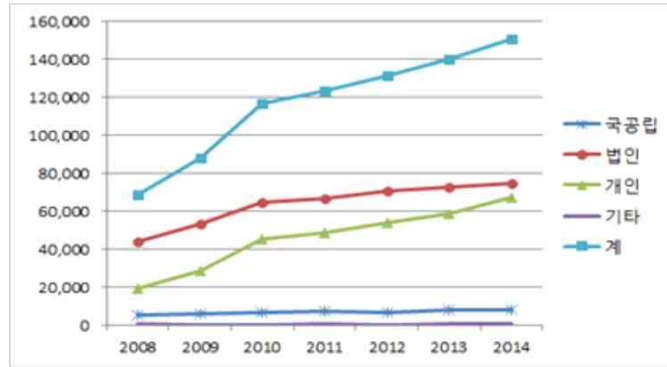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공급 현황 1

- ❖ 지자체 소유(국공립): 108개, 전체 시설의 2.2%, 전체 정원의 5%
- ❖ 시설 소유주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 추세(기관 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공급 현황 2

❖ 시설 소유주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 추세(정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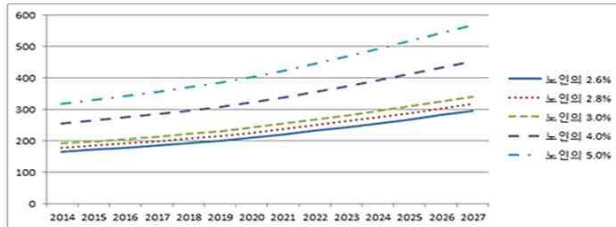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공급 전망

- ❖ 전반적으로 제도 도입 초기 공급의 가파른 증가세에서 2010년 전후로 증가세 둔화
- ❖ 제도 도입 초기 영리성이 높은 산업으로 홍보하였으나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적 기조 변화(보험수가 및 등급의 변화)
- ❖ 소규모시설의 빠른 증가
 - 이념적으로 소규모 시설은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바람직한 시설
 - 물리적 기준의 인력배치기준의 하향, 낮은 보험수가(2016년 0% 인상)
- ❖ 지역별 불균형 문제
 - 대도시 공급부족 현상(높은 지가 등), 원거리 시설입소(가족방문의 어려움 등)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 현황 및 전망

- ❖ 2014년 시설입소율: 2.6% VS. OECD 평균: 5%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에 기초하여 수요를 전망함(단위: 천명)



- ❖ 2027년 시설입소율 2.8% 가정, 2014년 정원(약 15만명)이 그대로 유지되면 16.8만 명의 수요초과
- ❖ 국공립 수요: 30%를 목표로 가정(시장지배력 통제, 역사적 합의)

노인장기요양시설 투자 규모 및 고려사항 1

- ❖ 기존 시설 매입의 장단점
 - 비용 절감
 - 경제성 저하
 - 물리적 구조의 변경의 어려움
- ❖ 신축의 장점
 - 투자 비용 증가
 - 시설을 이상적인 형태로 건립할 수 있음
- ❖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 비중이 약 30%가 될 수 있도록 공급부족분을 신규로 건립하는 방향

노인장기요양시설 투자 규모 및 고려사항 1

❖ 입소정원 설정의 이슈

- 소규모 시설: 가정과 같은 분위기, 경제적 효율성 저하
- 대규모 시설: 경제적인 타당성 증대, 노인의 삶의 질 저하

❖ 입소정원 150인으로 가정함(예시적 차원임)

- 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요양원
- 유닛케어 및 인력배치기준 강화를 통한 대규모 시설의 단점 극복
- 시설의 지리적 입지에 따라 탄력적인 기준 적용 필요(대도시 대형화, 중소/ 농촌지역은 소형화 등)

노인장기요양시설 투자 규모 및 고려사항 2

❖ 2014-2027년 국공립노인요양시설 수 추계(단위: 천명, 개)

연도	부족한 입소정원	전체 부족한 시설 수	부족분의 30%	부족분의 50%	부족분의 80%
2014	(29)	(193)	(58)	(97)	(155)
2015	(7)	(44)	(13)	(22)	(36)
2016	(7)	(45)	(13)	(22)	(36)
2017	(7)	(48)	(14)	(24)	(38)
2018	(8)	(52)	(16)	(26)	(41)
2019	(9)	(60)	(18)	(30)	(48)
2020	(10)	(69)	(21)	(34)	(55)
2021	(11)	(75)	(22)	(37)	(60)
2022	(12)	(80)	(24)	(40)	(64)
2023	(13)	(84)	(25)	(42)	(67)
2024	(13)	(88)	(27)	(44)	(71)
2025	(14)	(93)	(28)	(46)	(74)
2026	(14)	(95)	(29)	(48)	(76)
2027	(14)	(93)	(28)	(47)	(75)
누계	(168)	(1118)	(335)	(559)	(894)

노인장기요양시설 투자 규모 및 고려사항 3

- ❖ 150인 정원 시설 건립 시 서울지역은 60-80억 원, 중소도시는 20-30억 원 소요
- ❖ 전국 평균 1개소당 50억 원으로 가정(2015년 불변가치)
- ❖ 2017-2027년 국공립노인요양시설 건립 소요예산 추정치

구분		부족분의 30%	부족분의 50%	부족분의 80%
노인입소율 2.8%	개소수	335개	559개	894개
	소요예산	1조 6,750억원	2조 7,950억원	4조 4,700억원

노인장기요양시설 투자방식과 거버넌스 1

- ❖ 채권투자, 민자투자, 직접투자의 세 가지 방식 고려
 - 국공립 시설 채권투자: 투자자로서의 역할,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개입
 - 민자투자: 채권투자보다 국민연금 기금의 역할 증대, 구체적인 민자투자 방식에 따라 정부/공단의 역할 차별화
 - 직접투자: 투자자 및 운영자로서의 역할
- ❖ 투자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직영화/민간위탁의 옵션이 존재함(수가의 적정한 인상 필요)
 - 직영화
 - 서비스의 질, 재정 등에 대한 강한 공적 책임성, 재정적 안정성, 그리고 종사자들의 고용지위 안정성 등의 장점
 - 반대 입장: 인건비 부담, 전문인력 부족, 행정의 경직성 등의 문제점
 - 공무원 총액임금제 등의 조건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낮음

노인장기요양시설 투자방식과 거버넌스 1

❖ 민간위탁시 고려사항

- 지자체별로 민간위탁 선정의 기준차이 등으로 인해 표준적인 질 관리의 어려움 예상
- 위탁체 선정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특혜 논란, 임의위탁)
- 장기간 위탁시 운영개선이 미흡해지거나 시설을 사유화하는 경향
- 특정 대상집단의 기피 등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민간위탁기간이 단축되면서 채용 인력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민고 맡길 만한 위탁기관의 존재 여부 역시 고려해야 함

사회적 수익 : 산출(output)

- ❖ 사회적 수익은 시설입소율 2.8% 가정으로 계산함
- ❖ 국공립시설 입소가능노인의 수
 - 부족분의 50% 공급시 91,613명 입소가능
 - 이는 입소정원면에서 국공립 비중이 28.7%를 차지하게 됨(시설 비중 11%)
- ❖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 시나리오 1(비영리 실제운영 사례): 150인 정원 시설 83명 고용, 총 46,397명 고용 창출
 - 시나리오 2(이상적인 인력기준): 150인 정원 시설 103명 고용, 총 57,577명 고용 창출

사회적 수익 : 결과(outcome)

- ❖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 문제 해소
- ❖ 국공립 시설 종사자의 노동조건 향상: 소진, 스트레스, 이직 등 감소
- ❖ 국공립 시설 양질의 서비스 제공 → 타시설의 서비스 수준 견인
- ❖ 종사자의 임금 상승, 구매력 향상
- ❖ 노인의 삶의 질 증진, 국가의료비 절감
- ❖ 입소시설 노인의 가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
 - 3,554명은 취업 중단을, 그리고 1,734명은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않게 되는 효과 발생
- ❖ 가족돌봄을 둘러싼 갈등 감소, 돌봄부담 감소
- ❖ 국민연금 지출의 효용성 증대
- ❖ 시설에 대한 규제, 감독의 강화 및 시민 모니터링(예: 옴부즈맨)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제도적 수익 :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 ❖ 종사자 수의 증대로 인한 가입자 수 증대
 - 경제활동 10년, 월평균임금 200만원으로 가정
 - 시나리오 1: 1조 22억 원
 - 시나리오 2: 1조 2,437억 원
- ❖ 입소노인 가족의 경제활동참여로 인한 보험료 수익 증대
 - 시설입소로 인해 취업중단의 미발생: 169억 원(26.5개월)
 - 시설입소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의 미발생: 39억 원(12.8개월)

결론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연기금의 투자 방안 제시

- 수요에 근거한 투자 규모 제시: 10년간 약 3조(시설입소율 2.8%, 지자체별 평균 2개의 시설을 건립하여 총 559개소 건립)
- 투자방식에 따른 거버넌스 방안 검토
- 연기금 500조 중 0.6%의 투자를 통한 사회적 수익, 제도적 수익의 명시 및 일부 계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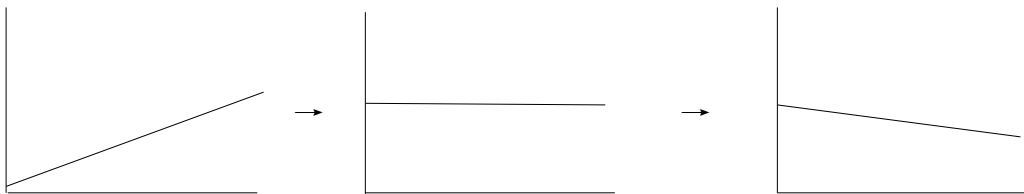
❖ 향후 과제

-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외의 대안적인 생활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투자 방안
- 연기금 활용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견인의 수단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설정해야한다

정용건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경제가 성장할수록 미래는 훨씬 더 큰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
-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은 심화 되고 구조화되고 있다.
- 금융의 발달이 새로운 수익의 창출보다는 위험을 높이고 증폭시키고 있다.
- 국민연금은 금융시장에 100% 투자되고 있다.
- 무리한 수익추구는 예견되지 못한 엄청난 손실을 예고하고 있다.
- 국민연금을 더 이상 연못 속의 고래로 키워서는 안 된다.
- 보험료>급여 → 보험료 < 급여가 많아지는 시기에 대비해야 한다.
- 금융부분에 있어서 기초자산을 넘어서는 자산군에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
- 우상향의 시대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 중기 자산(주식 채권 대체투자) 배분에 사회적 투자의 별도 sector를 설정해야 한다.
- 기여자인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야하는 국민연금 고유의 취지에 맞추고, 갈수록 증가하는 공공복지, 사회서비스 수요에도 조응해야 할 것이다.
- 사회인프라 투자가 가지는 부가가치(고용유발효과 등) 증대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 이를 통해서 국민들과 가입자로부터 얻는 신뢰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수익으로 귀결될 것이다.

토론문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들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 사업성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뉴스테이사업’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주택 정책의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으로 만 35세 이하의 청년에게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임대주택 자금을 빌려주자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투자운용 방안 중의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목적의 토론회 개최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등 여타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정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수급자 대비 보험료 납부자의 비율이 많다보니 향후 상당기간 동안 국민연금 재정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실상 내막을 들여다보면 본격적인 수급자가 발생하는 시점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년 11월 말 기준으로 확보하고 있는 국민연금적립금은 그 규모가 500조원을 넘는 막대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급자가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급여를 지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경상가 기준으로 2040년 초에 약 2,500조 원 가량의 기금을 적립해 놓아도, 이후 매년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을 포함할지라도 단 17년 만에 거대기금이 전량 소진된다는 재정추계가 지니고 있는 정책적인 함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언제부터인가 막연한 낙관주의들이 대두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들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국제적인 연금개혁 동향을 추적해보면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흔히 언급되는 외국의 사례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사례들이며, 특히 저출산·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빠른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 다름 아닌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스웨덴의 연금개혁을 필두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독일과 일본 역시 2004년 이미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여 인구변화와 저성장 추이에 연금제도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국가 차원에서의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를 구축해 놓고 있다.

특히 독일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금수급자까지 포함시켜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제도 지속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 중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일본은 재정추계기간을 100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인생 100세 시대에서 한 개인의 일생 주기 관점에서의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후 활성화된 공적연금을 활용한 복지부문 투자의 경우 사업 부실화 등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정책 방향을 대거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1999년 스웨덴의 연금개혁의 본질 역시 과거 공적연금에 내재되어있던 다양한 사회정책적인 요소들을 배제, 즉 노후소득 보장 그 자체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여타 사회정책적인 요소들은 연금제도가 아닌 국가의 다른 정책 영역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연금정책과 사회정책을 분리시킨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토론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서민들의 주거질 악화, 청년층의 주거문제,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보육문제,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제대로 돌보기 위한 장기요양시설, 재활시설 확충 등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해 본 토론자는 그 누구보다도 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바이다. 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투자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금융부문 투자에 집중되어있고, 국내 투자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긍정적인 측면들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사회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본 토론회 발제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토론자의 입장이다.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은 투명한 의사결정과 사후 철저한 평가가 담보될 수 여건이 조성된다고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정책 결정에서의 투명성, 진행과정, 사후 책임 문제 등에서 아직 가야할 길이 너무나 많다.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과거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수많은 사업들의 사후 평가결과들을 보면 왜 이런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명확해질 것 같다. 특정 정책을 도입할 당시에는 통상 효과성이 부풀려지나, 사후 평가 결과를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부실로 전락한 사업들이 한 두 개가 아니라서 특히 그렇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만약 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에 대대적으로 참여한 뒤, 국민연금 지출액 급증으로 관련 시설들에 대한 매각 필요성이 대두할 경우 제대로 된 가격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을 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시장원리에 따라서는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이다.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인데, 시설물들에 대한 현금화 필요성이 생겨날 때 제대로 현금화가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 어려움으로 인해 대거 현금화가 필요한 시점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된 시점이 될 것이다. 그만큼 더 장기요양 시설 등에 대한 국가적인 수요가 필요한 시점에서 가장 큰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받을 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집단이 이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허용될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수익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목소리와 결합한 정책 필요성 등으로 인해, 철저한 검증없이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라는 명목으로 우후죽순 사업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적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통한 사회적인 편익과 관련하여 발제문의 사회적인 편익 추정치에 대해 코멘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발제문의 산업연관표를 적용한 사회적 편익 추정에 따르면 공공부문, 공공재활, 노인요양부분에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제문의 공공보육을 예로 들면, 2027년 국공립 보육시설 목표치가 30%(총 10,219개) 달성될 경우 경제적 효과 추정치는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의 경우 이미 민간부문이 공급과잉인 상태다. 이미 상당부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생산유발효과는 과잉시설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감안되어야 하며, 취업유발효과 역시 실제보다 과대 계상되었다고 판단된다.

토론자 역시 우리의 보육시설, 공공재활, 노인요양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 동의하는 바이다. 기대수준은 높은 데, 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투입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한다면 (물론 정책 당국의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가 필요하기는 하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서비스 질에 불만이 많은 것은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에 비해 부담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토론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민간부문이 운영하더라도 적정 수준을 부담한다면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현실적인 문제는 보육문제 등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시설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들을 고려할 경우, 공적연금기금을 이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감안할 경우, 그 필요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는 제한적이며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정책 대안으로는 국민연금지사 건물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고 싶다.

국민연금기금 투자 다변화 차원에서 대체투자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가급적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동산의 실질가치 유지(또는 상승)가 가능한 핵심지역에 배치하도록 하되, 지사 건물들을 연금 업무 외에 사회투자 사업을 일정부분 담당할 수 있는 규모로 선택(매입 또는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1층에 보육시설, 2층과 3층에는

공단 자체 업무시설, 4층과 5층에는 장기요양시설을 함께 운영한다면 국민연금을 통한 One Stop 서비스와 국민연금의 긍정적인 기능들을 모든 세대가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우선적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 같은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적용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목적 달성, 국민연금기금의 대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 적지 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전국적으로 중요한 핵심 지역에 존재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건물을 통한 사회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에 대한 관리운영의 책임성 부분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연금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토론문

정창률 /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금융전문가 방식으로 바꾸어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토론회의 개최는 매우 의의가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투자에 대한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사회적 편익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됨.
- 토론자는 대부분의 사실에 동의하며 국민연금기금의 다양한 투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논의 방향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음.

- 일부 금융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매우 낮고, 공사화 등이 이루어지면 대단히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호도하고 있음.
- 이들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음. 국민연금 같은 거대기금을 운영해서 수익률을 (장기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판타지에 불과하며,¹⁾ 그들이 그동안 금융지식 없는 고객들을 유치 하던 방식을 국민연금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담론은 ‘수익률을 1% 높이면 기금고갈 시점이 몇 년 늦춰지고 실제 보험료 몇 % 높인 것과 동일한 인상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마치

1) KAIST의 김우창 (2015)에 따르면, 추가위험없이 향후 40년간 연평균 1% 포인트 이상의 초과수익을 달성할 이론적 확률은 1/20임.

‘고양이 목에 방울달면 우리는 앞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똑같음. 실행할 수 없을 것을 실행한다고 가정하고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실행할 수 있는 function은 없으면서 믿으라고 (혹은 할 수 있다고 말만) 하는데, 왜 믿어야 하는 건지?)

- 이론적으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 정도를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것이 사실임.
 - 경험적으로 봐도, 소위 금융전문가나 이해당사자들은 위탁투자 도입할 때나 위탁투자 비중 높일 때에도 끊임없이 앞으로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 공언했었지만, 그들의 주장은 실현된 바 없으며, 매년 수천억 원씩 수수료만 주머니 속에 그들에게 꽂아주고 있는 실정임. 한두 번 속았으면 그런 주장에 그만 속아야 정상임.
 - 10여년 이상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등을 보았을 때, 위험자산에 투자하나 안전자산에 투자하나 수익률은 거의 대동소이함. 다만,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면 수익률의 fluctuation 때문에 기금의 실제 이해당사자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안만 가중되며 이는 제도 신뢰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악의적인 (금융이해당사자들만을 위한) 수익률담론으로부터 결별해야 하며, 이 기금을 어떻게 기금의 주인인 국민연금가입자들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열린 논의가 있어야 함.
- 지금까지의 주된 문제제기는 금융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믿고 위험자산 투자나 해외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한정되어 있었음. 실제로 대안이 그것 하나만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함.
 - 그렇다고 모든 금융투자를 부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다만, 현재 다수의 기업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으로 구성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 주식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민연금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문제임. 언제까지 시장을 왜곡하면서까지 계속 주식시장에 기금을 밀어 넣고 있을 것인가?
 - 국민연금 가입자 다수가 위험자산 투자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기금의 주인인 가입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야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에 적극 지지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현재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 시도가 국민의 동의를 받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판단되며 금융이해당사자들 요구사항 들어주는 수준임.

- 각도를 바꾸어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를 보면, 외형만 공적 제도일 뿐 실제로는 영리 민간업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임.
 - 우리나라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는 의료, 장기요양, 보육인데, 이에 대해서 영리기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임.
 - 의료의 경우, 병상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2008년 11.1%에서 지난해 9.6%로 하락했으며, 기관수 기준으로 2008년 6.3%에서 지난해 5.6%로 감소했음. 이러한 공공의료의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며 민간의료가 발달한 미국 (24.9%) 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한 상태임.
 - 장기요양의 경우, 16900여개의 기관 가운데 국공립은 223개 (1.3%), 비영리 법인은 3660개 (21.6%)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영리기관에 의해서 운영됨.
 - 보육의 경우, 43600여개 기관 가운데, 국공립 2203개 (5.2%), 비영리법인 1,444개 (3.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사실상 영리기관에서 운영됨 (직장어린이집 523개 제외).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민간체계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음. 공공과 민간, 그리고 제3섹터는 각각 국가의 실패 (government failure),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 비영리의 실패 (voluntary failure) 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경우 공공부문이 너무 빈약하여 - 장기요양보험 1.3%, 보육시설 5% - 정부가 영리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없다는 데에 있음.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정부는 가격 형성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조차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료, 장기요양, 보육 서비스의 가격결정 - 수가 - 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협상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구축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임.

-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가격 데이터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 기관들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하는데 익숙해져 있음. 이러한 상태는 한계기관을 계속해서 살아남게 하여 제도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됨. 부연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 장기요양공급체계, 보육공급체계는 객관적인 산출 근거도 없이 민간 공급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또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의 경우 공급기관들의 영향력이 세지고 그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아지면서, 제도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당연히 공급자들의 이익에 기초한 것들이기 때문에 공공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일이 비일비재함. 예를 들어, 최근의 의원급 차등수가제가 건정심을 통해서 폐지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의사 1명당 환자 수에 대한 제한을 없앴으로써 진료의 공공성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음.
 - 사회서비스에 대한 영리기관에의 의존은 단기적으로 제도를 확대하면서 정부 재정을 아끼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담은 커지고 있음. 역설적으로 부동산 임대료가 오르면서 매년 이들 기관들에게 매년 수십조원을 임대료를 공공재원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현실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임.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할 때 정부의 일관된 태도는 예산부족이 었음.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수익률 담론에서만 벗어나다면,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
- 다만,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사안들이 있음. 기금사용은 기금을 소진하지 않고 투자하는 방식이어야 함. 사회서비스 시설 투자의 경우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국민연금기금은 이를 채권투자 방식으로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채권수익률만큼은 회수할 수 있는 것임 (원금도 당연히 회수할 수 있음). 따라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정부가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에 지나지 않음. (오히려 영리업자들이 사회서비스를 지배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사실, 진짜 문제는 이렇게 공공서비스를 넓히게 되는 상태에서 전달체계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임.
-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이라고 해도 사실상 대부분 위탁 방식으로 위탁받는 사람이 채용 등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있어 공공성이 담보된다고 장담할 수 없음.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대안 마련이 필요함. 그렇지 않으며, 공공서비스 늘려봤자 별거 없었다는 평가가 될지 우려됨.

토론 4

토론문

이창곤 / 한겨레 기자

토론 5

토론문

정재욱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발행일 2015. 02. 25.

발행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담 당 김잔디 간사 02-723-5056 pension1045@gmail.com

Copyright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2016 ※본 자료는 연금행동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pensionforall.kr/> **공식SN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PA0311>